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86
----------	------

발의연월일 : 2024. 12. 3.

발 의 자 : 한지아 · 백종현 · 이인선
김소희 · 고동진 · 최보운
임이자 · 조경태 · 서일준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규모 약 102조원 중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가 약 37.5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약 88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약 2.9만명에 달하는 등 온라인의 익명성 및 접근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제재 및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

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
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
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
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온
라인사행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관련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4.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
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
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 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전자금융거래”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6. “불법수익”이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은 재산, 그 행위의 보
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계된 자금 또
는 재산을 말한다.
7.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
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

산을 말한다.

8. “불법수익등”이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함하여진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불법수익등의 추정) 불법수익등을 산정할 때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
(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위원회

3.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④ 그 밖에 지급정지의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료조사) ①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및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자금거래 흐름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확인 및 조사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위원회,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7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

으나, 이전받은 자금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은 잔액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나.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다.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다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라.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2.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8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통지한 경우

3.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및 위원회는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

거나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① 위원회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관련 범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한 자 또는 불법수익등의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정보에 대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외사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조관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의 발매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발매된 복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2.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제17조(국외범) 제1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